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힘내자대한민국! 지키자지역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2020. 3.30.(월)~
2020. 6.7.(일) 매주 접수 및 시상

회차	접수기간	우수제안 발표
1회차	3.30 ~ 4.05	4.13 이후
2회차	4.06 ~ 4.12	4.20 이후
3회차	4.13 ~ 4.19	4.27 이후
4회차	4.20 ~ 4.26	5.04 이후
5회차	4.27 ~ 5.03	5.11 이후
6회차	5.04 ~ 5.10	5.18 이후
7회차	5.11 ~ 5.17	5.25 이후
8회차	5.18 ~ 5.24	6.01 이후
9회차	5.25 ~ 5.31	6.08 이후
10회차	6.01 ~ 6.07	6.15 이후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제안은 무엇이든

※ 주차 달리하여 복수 응모 가능

공모방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접수처
(https://www.krila.re.kr/customer/request/covid)

※ A4 2p 분량의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시상내역 매주 선정하여 시상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우수제안	2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3명이내
희망제안	5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10명이내

기타사항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③ 제안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지원과
(☎033-769-9904/9826)

공동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행정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 韓國政策學會 · 희망제작소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Vol.30
APRIL 2020
ISSN 2671-7352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자치분권과 미래비전」

APRIL 2020 Vol.30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주권 구현에 앞장서다

이슈
지방자치 미래비전 설계논의

논단
- 지방자치 미래비전 구상의 방향 :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 자치분권 미래비전 :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 간 관계의 미래
- 자치분권 미래비전 : 지나온 25년 회고와 앞으로 25년 과제

지방의회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다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에 힘을 싣다

우수사례
시민의 참여 속 혁신계획을 수립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ONTENTS

2020 **APRIL** VOL.30

Cover story



4월호 표지는 '자치분권 미래비전'을 담았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조사·연구하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정책개발 추진으로 자치분권 제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통권 제30호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윤태범
편집위원장 최인수
위원 김봉균, 김성주, 김정숙, 김지수, 박승규, 윤성일, 이효, 전대욱, 전성만
간사 탁영지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연락처 전화 033-769-9826 이메일 research@krila.re.kr
홈페이지 www.krila.re.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기 발행하는 소식지로 지방자치의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격월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research@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 견해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04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주권 구현에 앞장서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이슈

14 지방자치 미래비전 설계논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논단

28 지방자치 미래비전 구상의 방향 :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4 자치분권 미래비전 :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38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 간 관계의 미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46 자치분권 미래비전 : 지나온 25년 회고와 앞으로 25년 과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지방의회

5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다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60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에 힘을 싣다
이주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입법동향

70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의 확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수사례

74 시민의 참여 속 혁신계획을 수립하다!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84 興이 시작되는 도시 시흥

KRILA 인포그래픽

92 고향사랑 지역사랑 나의 손으로 고향을 품안愛 사랑을 지역愛

94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험, 사회혁신

트렌드 카페

96 대한민국은 지금 On-Line 구독 중 OTTOver The Top 전성시대

98 **연구원 동정**

100 **KRILA 보고서**



자치분권기획단장 취임 기념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주권 구현**에 앞장서다

Interviewee :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Interviewer :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호

– 現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WHO?

학력

- 경찰대학 법학 학사

경력

- 1992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 2009–2010 대통령비서실 비상경제상황실 행정관
- 2010–2012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자치협력관
- 2012–2013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과장
- 2015–2016 울산광역시청 기획조정실 실장
- 2016–2017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
- 2017–2018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 2018–2020 제35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구상하는데 정부가 구상한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상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단장님 주도하에 민-관이 함께 협치하여 자치분권이 탄력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도 그런 역할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Q

A 저는 지난 4월 6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경남도에서 1년 8개월, 약 600일 정도 있으면서 자치분권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본부로 왜 복귀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자치분권기획단장을 꼭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의지를 가지면 다루지 못할 과제가 없을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또한 대통령소속 위원회로서 제도적으로 든든한 뒷받침이 됩니다. 아주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성과는 무엇입니까?

Q

A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자치분권 3법[2]의 조기 입법화와 재정분권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함으로써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5조 원을 확충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자치경찰) 개정안



현재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주민자치회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추진한 지 16년 만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더욱 신속한 지방이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로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 없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 47개소('15) → 83개소('17) → 122개소('18) → 408개소('19)

Q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A 2020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이자 2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이를 평가하였고, 올해에도 이를 추진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1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곧 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과를 좀 더 속도감 있게 내야겠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미래비전 2040'에 발맞추어 자치발전을 위한 미래과제들을 위해 더욱 중점을 두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많은 대도시 특례제도도 좀 더 구조화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대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나 권한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하는 등의 미래과제들에 대해서도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권이 정부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현장에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집중적·단계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기획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 66
> 성과를 집중적으로 단계적으로 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기획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 99

Q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A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어떻게 정례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그 외에도 지방자치학회나 지방행정연구원을 비롯한 시·도 연구원과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 안착을 위해서 연구기관과 학회,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정책고객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이고, 위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논의를 한 게 지방자치단체가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하여 위원회도 하나의 주체로서 포함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회 존재감도 나타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 같은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모델을 기존의 협력협의회 모델로 갈 것이냐,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로 갈 것이냐, 또 부울경 전체적으로 공동과제가 있게 되면 중앙차원에서 재정분담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자치분권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지방에서 하는 활동이고 메아리가 없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부터 자치분권위원회가 결합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도 같이 고민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지방분권형 맞춤형 분권과제를 지방과 위원회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 '현장에서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인데
> 앞으로는 평가 기제를 국민 관점과
> 지자체 관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그래서 자치분권 과제 정책 만족도,
> 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 일단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소속 위원회 출범이 기대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주체적으로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아우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하다보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 행정편의주의라든지 중앙부처 위주,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행과정에서 국민들과 유리돼 정책에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A 1기 자치분권위원회 때 중앙부처가 이행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위한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관구성의 다양화 과제 부분에서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32개 과제가 보통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일부는 우수한 과제도 있습니다. 평가과정을 보니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하고 그걸 올리면 위원회가 2차 평가를 하고 3개 등급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자치분권 33개 과제에 대해서 실제 국민들의 평가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연구기관이나 학회는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인데 앞으로는 평가 기제를 국민의 관점과 지자체의 관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자치분권 과제 정책 만족도 및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일단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약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제도개선 사례가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또 수요자들은 만족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계속적으로 피드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은 예산을 먼저 생각하다보니 수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괴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위원장, 단장 위치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생각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학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학회의 그러한 의견도 들으면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A 그래서 위원회가 지방행정연구원과 보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할 과제, 특례시든지 교육자치든지, 특별행정기관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파견을 나가 있는데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이런 미래과제 지원을 위한 인력협조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연구원과도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지만 다양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분권 3법 중 하나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A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쟁점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들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회통과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 최선을 다해서 야당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훨씬 더 강화된 선제적 조치들이 실행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일반화되어서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형태, 지방의 선조치들이 국정의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먼저 바꿔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중앙차원에서는 현장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먼저 가이드라인이 오면, 지방에서 먼저 강한 선제적 조치들을 하게 되고 이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코로나19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잘 대응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또 총리님 주재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매일 개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본 회의에는 총리가 계시고 관계 장관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은 영상으로 보는 회의가 매일 열리는데 마스크 문제라든지, 신천지 교회 전수조사 문제라든지, 해외 들어오는 입국자 전수조사문제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입국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문제 등 시도지사님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대응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총리님께 말씀 드리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맞게끔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국회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1개 시에서 볼 때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앙은 따로 회의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유리되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잘 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이야말로 위기 시에 현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현장 격리를 콘테이너 하우스, 즉 1인 하우스를 그 지역으로 보내 격리를 시키거나 대지진때도 수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A 행정안전부 중앙재난관리 쪽에서 재난관리 범위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추가하고 비상동원자원대상에 격리시설 등을 사전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교훈은 지자체 간 협력입니다. 그러한 협력 덕분에 '대구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가 산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고 대구 환자들을 경남에서도 받아주고 광주에서도 받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는 아예 봉쇄를 합니다. 우리는 대구 환자들을 다른 지역에 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로 옮겼고, 그런 과정에서 대구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님비 현상처럼 우리 지역은 절대 못 받는다고 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안됐다면 절대 못 막았을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나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와주려는 그 마음들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좋은 선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읍·면도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나눠줄 때 일부 지자체는 읍·면·동을 통해서 마스크를 직접 나눠 준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부처가 읍·면·동이 창구가 되었듯이 '우리 읍·면·동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읍·면·동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그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읍·면·동 기능 간소화, 읍·면·동 기능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시·군·구청으로 넘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유사시에 주민친화조직으로써 그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기 시 대응은 물론 평상 시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매개체 역할 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읍·면·동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유럽의 지방정부가 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이지요. 어떤 부분을 잘했고 못했는지를 떠나서 그 속에서 교훈이나 앞으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비교 간담회도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 지방정부가 훨씬 더 빛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분권의 축적물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권을 해서 위기에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과정에서 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연구원, 시·도 연구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제도에도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Q

A 주민자치회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였고, 주민자치회가 2015년 47개에서 지난해 408개로 늘었습니다.

지역에서 정책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은 주민자치회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나, 정부가 바뀌면서 간판만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응도 주민자치회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Q

A 코로나19 대응이 주민자치회랑 잘 연결

되면 훨씬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기능들을 발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했는데 좀 더 실질적인 기능을 찾아서 "아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체감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입장에서는 자치조직권을 어떻게 하느냐 등은 주민의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마스크가 필요하면 주민자치회에 얘기하면 관에서 지원을 받고 그 대상이 내가 된다면 그만큼 성공한 것 아닐까요. 지금 분권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부모님, 가족, 친지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아!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라고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인식시켜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Q

A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대구와 합천 쪽으로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봉쇄하지 않고 가급적 대구 지역에 대한 왕래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기꺼이 본인들의 용무와 개인 연락처를 읍·면·동 직원에게 알려줘서 읍·면·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계기로 더 탄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끝나면 닥칠 경제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재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지로 자기 생계를 낫게 하려는 노력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주민자치회나 주민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위기상황에서 보여줬던 역할수행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시장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권이고 균형발전이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Q

A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위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Q

A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기 성과를 발판으로 제2기 위원회에서는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법제화, 현장에서 필요한 지방이양 사무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곧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20대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으로부터 주민주권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골고루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로 나갑시다.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20.5.29.) 시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됩니다.
- 두 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서 정부·여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다,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지방4대협의체,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년 간담회를 갖고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여당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면담을 통해 조속한 법 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회,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5월에는 꼭 국회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미래비전 설계논의



I 서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1991년을 기점으로 보면, 30년이 경과되어 단순히 일천한 역사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사회분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특정제도의 도입이 30년을 경과하게 되면, 제도의 근간은 정착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방자치의 논의는 지방분권에 초점이 두어져 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분권과 더불어 생활자치라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러하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논의들이 지방자치라는 제도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 성숙과정의 단계를 중심으로 초기단계에서 다음단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제도적 수준의 제고뿐만 아니라 환경적 대응력의 구비도 필요하다는 포괄적 접근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의 환경들은 기존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변화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소멸까지 연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은 지방행정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도 이전과는 다른 지방행정의 수요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환경변수로서의 남북통일은 현행의 지방자치 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환경변화들은 단순히 기존에 논의되던 자치제도의 발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제도의 변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향후 20년간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환경변수를 선정하고, 환경변수의 전개양상을 분석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의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것이다. 미래비전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하는 것으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은 비전설계의 일반적 주체인 조직이 아니라 제도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비전설계의 특성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다만, 비전설계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서는 조직과 제도의 차이가 적정하게 반영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Ⅱ 미래비전의 설계논리

1) 미래비전의 의의

비전은 국가를 비롯한 모든 조직에서 조직발전과 연계하여 통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는 작업의 하나이다. 비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김미곤 외, 2017). 일정한 미래시점을 전제로 조직의 비전을 설계하는 배경은 개별조직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김동철·서영우, 2008). 첫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이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환경이 지대하여 기존의 비전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할 경우 새로운 비전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기관장의 교체 등의 사유발생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기관장의 철학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서 조직운영의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조직의 미래상인 비전은 기관장의 교체에 따라서 새롭게 설계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셋째, 기존에 수립된 비전의 구조적 한계 등이다. 기존에 비전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된 경우에도 논리적 체계성이 미흡하거나 새로운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면,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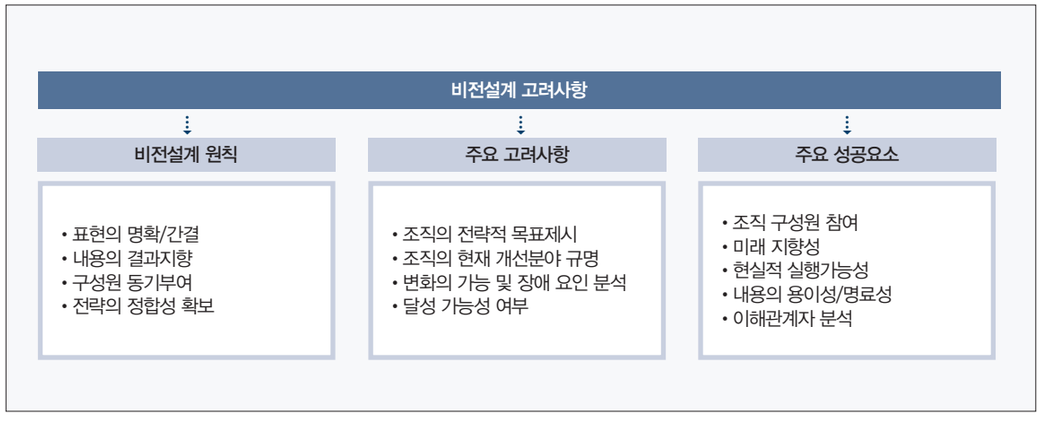
이 외에도 해당조직이 정부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속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배경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미래비전은 단순한 기대와 달리 조직운영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조동성, 1999). 우선, 미래비전은 미래의 환경변화와 그러한 환경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나 관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조직의 기관장인 리더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조직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관점들이 미래비전으로 설계되는 것이다. 다음, 미래비전은 미래에 대한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의 집합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비전은 순간적인 발상이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설계되는 까닭에 조직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래비전은 구성원의 행태를 판단하게 하는 규범의 기능을 하게 된다.

미래비전의 합리적 설계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수립된 미래비전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행동준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2) 비전설계의 고려요소

전술한 바와 같은 미래비전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계과정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김동철·서영우, 2008). 우선, 비전의 설계에서는 일정한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비전의 표현은 명확하고도 간결해야 하고, 내용은 미래상이 담겨진 결과 지향적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인 동시에 하위단위의 전략과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비전의 내용에서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가 제시되고,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개선대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수립된 비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전설계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전의 내용이 미래 지향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비전의 내용에 대한 구성원의 공유를 위하여 용이하고도 명료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수요나 기대가 충분히 파악되어야 한다.

〈그림 1〉 비전설계의 고려요소



3) 비설설계의 절차

한편, 미래비전을 설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김동철·서영우, 2008). 먼저, 기존에 관련비전이 수립되어 있다면,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비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수립 비전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유사한 제반의 비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특히,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비전설계의 과정 등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기존의 비전에 대한 분석결과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비전의 체계와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수에 대한 예측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단계에서는 시안으로 작성된 비전체계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이유는 비전이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 전체에 공유되고 합의될 때 비로소 달성목표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인 미래비전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확정된 비전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공포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의 미래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적 과정은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고, 조직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2〉 비전설계의 고려요소



4)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준용

전술한 미래비전의 설계논리는 원칙적으로 조직체를 대상으로 논의된 것이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은 조직체가 아닌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대상으로 설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과 제도의 차이에 따른 미래비전의 설계방식에 대한 조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비전의 설계에서 고려요소 등의 경우에는 조직과 제도의 차이가 부각될 필요가 없으나, 설계절차에서는 다소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술한 미래비전의 설계절차를 대상으로 조직과 제도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과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제도의 경우에도 조직의 미래비전 설계절차를 준영하되,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의견수렴의 대상이 달라진다. 조직의 미래비전에서는 의견수렴의 대상이 조직 구성원이 되지만, 제도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와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표 1〉 조직과 제도의 비전설계의 절차

구분	조직대상	제도대상
비전진단	현 비전체계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내외부 환경분석 등의 기준)	–
비전 벤치마킹	선진사례 등을 대상으로 비전체계 및 목표, 전략 등에 대한 사례분석	–
비전체계/ 테마설정	비전체계의 수립 및 전략과제 중심의 주요 테마의 선택 및 정리	–
비전 워크숍	기관장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전안을 선정하기 위한 워크숍 실시	지방자치 이해관계자 또는 전체국민의 의견수렴 절차적용
비전 기술서	벤치마킹 및 워크숍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비전체계의 내용을 작성	–

Ⅲ 지방자치의 환경변화

1) 환경변화의 주요변수

일반적으로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배경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환경의 변화이다. 특히 기관장의 교체 등과 같이 내부적인 핵심사유가 발생하는 조직과 달리 제도의 경우에는 환경변화가 핵심사유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 역시 개별 지방자치

단체와 달리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는 미래비전의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변수이다.

미래의 환경변화를 전망하는 작업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준비나 대응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들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미래전망에 대한 각종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사회분야별로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다. 미래전망을 담고 있는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미래비전 2040', '10년 후 우리나라에 중요한 10대 이슈', '과학기술 예측조사', '유엔미래보고서 2040예측'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부문별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와 라이프스타일, 도시화 심화, 과학기술융합, 저성장 기조,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 등이 거시적 환경변화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한할 경우 남북통일 역시 중요한 환경변화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표 2〉 환경변화의 주요 변수도출

구분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CY	변수선정
과학기술 미래비전	• 저출산 · 초고령사회	• 과학기술융합 가속화(4차 산업혁명 도래)	• 지식기반사회 도래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자원확보	• 새로운 안보 이슈 등장	• 저출산 · 고령화 • 라이프스타일 • 도시화 심화 • 과학기술융합 • 저성장 기조 • 불균형 심화 • 기후변화 심화 • 남북통일
미래비전 2040	• 저출산 · 초고령사회 • 여가문화 증대 • 메가시티		• 세계경제축의 다변화		• 세계경제축의 다변화	
10년 후 우리나라에 중요한 10대 이슈	• 저출산 · 초고령사회		• 저성장 기조 유지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자원확보 • 에너지자원 고갈	• 세계경제축의 다변화 • 북한과 안보 및 통일 문제	
과학기술 예측조사	• 저출산 · 초고령사회 • 사회불평등 • 삶의 질 향상	• 과학기술융합 가속화(4차 산업혁명 도래)		• 에너지자원 고갈 •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재난 위험 증가	• 새로운 안보 이슈	
유엔미래 보고서 2040예측	• 초고령사회 • 삶의 질 향상 • 메가시티 • 디지털시대 • 교육혁명		• 1인 기업시대 • 지식기반사회 도래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및 자원확보	• 세계통합	

2) 주요변수의 전망

상기에서 제시된 주요 환경변화의 변수들은 모두가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OECD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현상이다. OECD의 통계(2017년)에 따르면, 선진국의 노령인구 비중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저출산과 맞물려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는 2030년에 이르면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2060년에 이르면 선진국의 고령인구는 40%에 육박하여 국가별 생산인구의 비중은 5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강원연구원, 2016). 특히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추이는 고령화에서 고령단계에 이르는 소요연수가 18년이었고, 고령에서 초고령단계에 이르는 소요연수가 8년으로 전망되어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속도는 시간적, 재정적, 구조적 측면에서 국가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은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유통비용을 낮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과 프로세서, 데이터, 사물 등 만물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초연결사회를 이끌 것으로 예측되며, 지능로봇, 재택근무 보편화, 전자종이의 만능 디스플레이화 등이 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개발원(2010년)이 인용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현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와 기술발전 및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가치부여는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로 이어져 레저나 관광 등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균형의 문제도 주목할 만한 변수이다. OECD(2014)의 '향후 50년간의 정책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10년 OECD 29개 회원국 중 4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60년에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OECD회원국 중 3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고민의 하나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USDA, 2010) 경제조사국의 2014년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30년까지 하향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GDP성장률은 2020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에는 2.06%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라는 성장동력을 지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의 비약적인 성장전망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한 환경변화의 하나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통일은 여타의 환경변화와 달리 통일정책이나 정치적 여건 등에 따라 상당한 가변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서 시기특정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기대는 상존한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통일은 기존의 독일 등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중앙단위뿐만 아니라 지방단위에도 지방행정체제나 인력 및 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간주된다.

66
'향후 50년간의 정책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10년 OECD 29개 회원국 중 4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60년에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OECD회원국 중 3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99

3) 지방자치의 영향

전술한 환경변화는 자체적인 트랜드나 속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도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 환경변화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영향관계를 개략적이나마 추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의 양적 감소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위기와 복지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은 생산방식과 유통방식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술의 첨단화와 더불어 공급방식의 전환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삶의 질 제고와 레저문화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다양화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및 공간적 격차확대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및 갈등관리에 대한 수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통일은 단일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나, 이에 따른 지방행정체제의 조정과 행정분야별 지원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환경변화의 지방자치 영향내용

구분	속성	지방자치 영향
저출산 고령화	• 인구의 양적 감소 •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지방자치단체 존립여부 • 복지비용의 증가
제4차 산업혁명	• 생산방식의 변화 • 유통방식의 변화	• 행정기술의 첨단화 • 행정서비스 공급방식 변화
라이프 스타일	• 삶의 질 제고 • 레저문화의 확대	• 행정수요의 다양화 • 고품질 행정서비스 수요증가
사회적 불평등	• 사회적 및 공간적 격차확대 • 사회적 갈등양산	• 균형발전 요구증가 • 갈등관리 수요확대
남북통일	• 단일국가의 탄생	• 지방행정체제 조정 • 행정분야별 지원수요 증가

Ⅳ 미래비전의 실현전략

1) 기존의 사례검토

지방자치에 관한 비전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역대정부에서 나름대로 수립을 하여 왔다. 다만, 해당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고, 비전의 명칭도 분권정책으로 부여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을 검토하는 사례로서는 충분한 시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66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을 검토하는 사례로서는 충분한 시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99

노무현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에서 수립된 지방자치의 비전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체계는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7대 전략 및 4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이명박 정부의 비전체계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2). 박근혜 정부의 비전체계는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문재인 정부의 비전체계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대 전략 및 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자치분권위원회, 2018).

상기의 역대정부별 비전체계가 추구하는 이념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방향성을 보유하고 있다. 역대정부별 비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 자치단체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참여성 및 자치단체의 협력성 등이 동일한 추구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정부의 추구이념에 더하여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추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와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 등의 과제를 통해서 기존의 지방자치의 획일적 시스템에서 다양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념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역대정부의 주민자치회 정책변천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비전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 자율과 정의,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방자치 역량 확대 • 지역경쟁력 강화 • 공동체 민주시민의식 제고	• 주민편익 증진 • 행정효율 제고 • 지방경쟁력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전략	•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재배분 •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시민사회 활성화 • 협력적 정부 간 관계 정립	• 권한 및 기능 재배분 • 지방재정 확충 • 자치역량 강화 • 협력 및 공감대 확산	•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주민중심 생활자치 · 근린자치 실현 •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 주민주권 구현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제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과제	• 사무구분체계 개선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대도시특례제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교육자치제도 개선 • 자치경찰제도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및 분권수준측정제도 도입 •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지방교부세 법정율 단계적 상향조정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사무구분체계 개선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 교육자치제도 개선 • 자치경찰제도 도입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지방재정의 투명성 · 건전성 제고 •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의회의 전문성 · 자율성 강화 • 주민직접참여제도 보완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선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 주민 참여권 보장 •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도입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 조례 제 · 개정의 주민직접방안제도 도입 •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과제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 국고보조금 정비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 • 지방채 발행승인제도 개선 •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 •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 자치단체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 • 재정운영 투명성 · 건전성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자치조직권 강화 •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 자치단체 자체혁신체제 구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선 •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 주민소송제도 도입 • 주민소환제도 도입 •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 조례 제 · 개폐청구제 개선 • 주민자치제도 개선 • 자원봉사활동 장려 · 지원 •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주민투표제도 도입 •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 •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 • 중앙-지방, 지방 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 마련 및 진단 · 평가 • 지방자치행정체제 정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 분쟁조정기능 강화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활용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 자원봉사활동 장려 · 지원 •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 자치경찰제도 도입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 통합 노력 •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 도입 •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 · 면 · 동 통합 • 특별 · 광역시 자치구 ·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 시 · 군 · 구 통합 및 통합지자체 특례발굴	•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대도시 특례 확대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 · 협력 활성화 • 국세 · 지방세 구조개선 •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국고보조사업 개편 •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 운영 •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제주 ·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비교	• 자치단체 자율성 • 자치단체 책임성 • 자치단체 효율성 • 지역주민 참여성 • 자치단체 협력성	• 자치단체 자율성 • 자치단체 책임성 • 자치단체 효율성 • 지역주민 참여성 • 자치단체 협력성	• 자치단체 자율성 • 자치단체 책임성 • 자치단체 효율성 • 지역주민 참여성 • 자치단체 협력성	• 자치단체 자율성 • 지방자치 다양성 • 자치단체 책임성 • 자치단체 효율성 • 지역주민 참여성 • 자치단체 협력성

2) 미래비전의 설계전략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은 상기의 역대정부에서 수립한 정부별 비전과 다르다. 전술한 역대정부의 지방자치 비전이 암묵적으로 5년 임기를 전제로 환경변화보다는 제도자체의 선진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에서 논의되는 지방자치 미래비전은 2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관점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선진화에 대한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의 구축이다. 다만, 이러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향후 20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의 제도적 선진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 자치단체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참여성 및 자치단체의 협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비전에서 고려한 이념들이 지방자치의 제도적 선진화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였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한 지방자치의 다양성은 제도적 선진화의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 의미에서 접근을 한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지역주민의 참여성 및 제도적 다양성에서 시작된다. 이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치단체의 효율성 및 자치단체의 협력성이다. 다만, 향후 20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자치단체의 효율성 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참여성 및 자치단체의 협력성 등은 향후에도 관련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66
>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설계는 향후 20년이라는 시간경과를 전제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선진화 수준을 감안하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9

한편, 행정환경의 변화는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들을 지방자치의 주요 구성요소별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의 구조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불평등 및 남북통일은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형태 다양화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구조적 시스템이 작동됨으로써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 지방자치의 운영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이 기능조정뿐만 아니라 공급방식의 변화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행정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공급에서도 첨단화된 각종 융합적 기술이 적용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에서도 기존의 방식들이 전면적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문화와 관광 등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관장기능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설계는 향후 20년이라는 시간경과를 전제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선진화 수준을 감안하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방자치의 제도적 선진화나 행정환경의 변화의 일방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양자의 변화를 동시에 검토하여 객관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구비하되, 지방자치의 제도적 선진화에 대한 기대도 함께 반영한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철 · 서영우(2008). 경영전략 수립방법론. 시그마인사이트컴.
- 김미곤 · 여유진 · 정해식 · 변재관 · 김성아 · 조한나(2017).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7–95.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 조동성(1999). 21세기를 위한 전략경영.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2). 지방분권 백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한국개발원(2010). 미래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재인용.
- USDA, Real GDP (2010 dollars) Projections, 12/18/2014.

논단

지방자치 미래비전 구상의 방향 :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그 기본적인 전제로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지만 어느 분야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인구감소의 문제와 스마트화의 급격한 진전이다. 이미 회피할 수 없는 변화의 결과가 예견된 인구감소와 변화의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스마트화의 조합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도 미래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가 일본의 경우인데,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0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 인가를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의 자치체전략2040구상연구회(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활동이 그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연구회는 2040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구상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구성원은 각 분야별 대학교수(정치, 경제, 법, 인간과학, 도시개발 등)와 민간기업 대표, OECD전문가, 민간조사센터연구원 등 10명이며, 지원을 위한 서무역할은 총무성 자치행정국 행정과, 시정촌과, 행정경영지원실에서 공동으로 맡고 있다. 연구회는 2018년 4월 1차 보고와 7월 2차 보고를 통하여 기본구상을 제시하였고, 아베총리는 동년 개최된 제32차 지방제도 조사회에 여기서 만들어진 구상의 조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회의 1차보고와 2차보고 자료의 핵심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일본에서 준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 미래 자치제 전략의
> 기본 구상에 있어서도
> ‘인구감소시대의
> 패러다임 전환 필요’를
>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 전략적 대응방안의 구상에서는
> 스마트사회의 특성을
>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을
> 특징으로 하고 있다.
> ”

일본의 ‘자치체전략2040’ 1차 보고서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망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스마트사회이다. 때문에 미래 자치제 전략의 기본 구상에 있어서도 ‘인구감소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전략적 대응방안의 구상에서는 스마트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차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게 5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되는 사항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종래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원칙처럼 여겨져 온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풀셋주의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풀셋주의는 우리에게는 종합행정의 원칙으로 이해되어 온 것인데, 이를 없애고 권역단위나 권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광역(도도부현)과 기초(시정촌)의 2층제에 대한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응한 공동의 업무처리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공·공·사(公·共·私)의 베스트믹스, 즉 상황에 요구되는 최적의 조합,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도출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공통화를 통하여 행정자원의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표 1〉 2040자치체전략 기본방향성(1차보고서)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풀셋주의 배제 > 권역단위/권역초월 도시, 지방의 자치단체간 유기적 연계
- 도도부현, 시정촌의 2층제 유연화 > 각각의 지역에 대응하는 공통기반 구축
- 공 · 공 · 사(公 · 共 · 私)의 베스트믹스로 사회과제 해결 >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장 도출
-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 · 공통화 > ICT 기반 자치체 행정 혁신
- 동경권 종합서비스공급체제 구축

출처 :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第1次報告, 2018. 4. 26. 내용 재구성.

논단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기초하여 4가지 기본방향과 각각의 핵심주제(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동경권 플랫폼 구축 논의는 본 원고에서는 제외함). 첫째, '스마트자치체로의 전환'인데, 여기서는 ICT 등 기반의 스마트자치체 운영과 자치체 행정의 표준화·공통화를 핵심주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스마트자치체란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이 처리가능한 사무작업은 AI, 로보틱스에 기반한 자동화처리에 의하며, 직원은 기획입안업무나 주민직접서비스 제공 등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주력하는 자치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자치체에 의하여 자치체의 역할범위, 운영방식, 직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에 변화가 수반되며,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전문 인력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복투자의 방지하는 틀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공·공·사(公·共·私)에 의한 주민 삶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빌더 역할, 새로운 공·공·사의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개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담당자 확보를 핵심주제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공(公), 공(共), 사(私) 각각의 영역에서 자치체직원 감소, 지연조직의 약화,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등 사회 내 개개인의 삶의 유지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공·공·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플랫폼빌더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더하여 이러한 협력관계, 예컨대 ICT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확대 등은 공공·민간부문 모두에서의 노동력 공급부족에 대처하고, 주민생활의 유지에 불가결한 수요에 효과적 대응전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권역 매니지먼트와 2층제의 유연화'로서 지방권의 권역적 관리와 광역·기초의 2층제 유연화를 핵심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래 지방권의 90%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가 예측되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인구에 의하여 유지 가능한 3차 산업, 공공시설, 인프라, 의료자원 등의 전체량을 감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에 불가결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적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하여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역할의 유연화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표 2〉 새로운 자치체 행정의 기본 구상(2차보고서)

기본방향	핵심주제
스마트자치체로의 전환	• ICT 등 기반의 스마트자치체 운영 • 자치체 행정의 표준화 · 공통화
공 · 공 · 사(公 · 共 · 私)에 의한 삶의 유지	• 플랫폼빌더로의 전환 • 새로운 공 · 공 · 사의 협력관계 구축 • 지역사회 개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담당자 확보
권역 매니지먼트와 2층제의 유연화	• 지방권의 권역관리 • 2층제의 유연화
동경권 플랫폼	• 3대 도시권 각각의 최적 매니지먼트 • 동경권 플랫폼 구축

출처 :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第2次報告, 2018. 7. 3.

이상에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미래전략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자치체전략 2040'은 2040년을 목표로 구상되고 있지만, 이미 핵심적 키워드의 상당수가 논의중에 있고, 일부는 법제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자치체전략 2040은 단순히 미래의 전망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미 시작된 준비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준비작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구감소와 스마트화라는 환경속에서 조직운영의 탄력성(네트워크화)을 부여하고, 상정가능한 대안적 선택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는 제도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없거나 적더라도 다양한 제도에 대하여 네트워크 방안이나 선택이 가능한 대안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의 탄력적 연계, 행정사무의 공동처리, 광역연합 등 협력적 사무처리의 방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기관 및 인력의 공동 운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회기운영의 선택이 가능하며, 현재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복수의 형태 중 선택이 가능한 방식을 검토중에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제도선택지의 개발을 통하여 지방행정운영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변화의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본적인 전제나 방향성은 일본의 대응방향과 큰 틀에서 흐름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2030년을 목표로 하여 일본의 경우보다는 좀 더 근접한 미래를 상정하고 있지만, 2030년대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할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통계청의 2019년 발표에 의하면 2028년을 정점으로 본격적으로 인구감소세가 예측되고, 2030년대 고령화율은 세계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또한 그리 밝지 못한데,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와 같은 인구예측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21~2030년 2.0%, 2031~2040년 1.3%, 2041~2050년 1.0%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경제상황에서 선행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치체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일본의 준비과정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를 든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종합행정 원칙의 탈피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특성의 변화, 행정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미래환경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있어 불가피하게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인구의 감소와 행정의 스마트화는 지방자치단체 간 독자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연계협력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운영방식에 있어 네트워크적 사고에 기반한 유연화와 탄력성이다. 보다 다양화하고 개별화되어질 행정환경에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에 있어 경직성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다양한 미래지향적 변화를 내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자원, 특히 인력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특성의 변화, 행정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미래환경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있어 불가피하게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준비도 빠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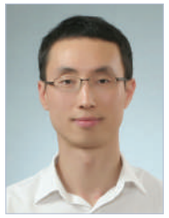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9.2.
- 연합인포맥스, “KDI ‘2050년 인구고령화 정점 … 성장률 1%대 하락’”, 2019.4.18.
-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第1次報告, 2018.4.
-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第2次報告, 2018.7.

논단

자치분권 미래비전 :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1)]





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요소를 분권, 참여로 볼 때, 자치분권은 협의적 의미에서는 분권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할 때, 자치분권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분권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분권과 참여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해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치분권을 지방자치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의의 분권 위주의 논의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자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자치분권의 미래비전을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으로 간주하고 분권과 참여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김대욱. (2019).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행정연구, 33(3)' 의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Ⅱ. 지방자치의 양대 요소

본 글에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요소를 중심으로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바, 지방자치의 양대 요소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양대 요소는 분권, 참여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자치측면에서는 단체자치, 관계측면에서는 상위정부-지방관계, 이슈측면에서는 분권/집권, 관련이념은 능률, 민주와 연계된다.
참여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과정의 전반을 의미하며, 자치측면에서 주민자치, 관계측면에서 주민-정부관계, 이슈측면에서 참여/통제, 이념측면에서 민주, 능률과 연계된다. 분권과 참여의 세부구성요소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분권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참여 – 선거참여, 직접참여, 근린참여

〈표 1〉 지방자치의 양대 구성요소

구분	자치측면	관계	이슈	관련이념
분권	단체자치	상위정부–지방	분권/집권	능률, 민주
참여	주민자치	주민–정부	참여/통제	민주, 능률

자료: 이승종(2002: 8)에서 중립을 제외하고 재구성, 김대욱(2019)에서 재인용

Ⅲ.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지방자치의 3대 요소별로 과거와 현재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과거는 2002년의 수준을, 현재는 2019년의 수준을 시점으로 삼았다. 먼저 분권을 살펴보겠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자치입법권한이 법령에 의해 제약된 상황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치행정권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비율이 과거 78:22에서 현재는 68:32의 수준으로 지방사무의 비율이 확대되었다. 자치조직권의 경우

논단

과거에는 표준정원제를 통한 과도한 제약에서 현재는 기준인건비제를 통한 자율권 확대로 변화하였다. 자치재정권의 경우, 지방세 과세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변화가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의존재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참여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참여는 과거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참여의 제한이 현재는 정당공천제를 통하여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정당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참여의 경우 주민투표 미도입, 주민발의 도입, 주민소환 미도입에서 주민투표 도입, 주민발의 도입, 주민소환 도입으로 발전되었다. 근린참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유도되고 있다.

〈표 2〉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구분	세부요소	과거(2002년)	현재(2019년)
분권	자치입법권	• 법령에 의한 제약	• 법령에 의한 제약 지속 • 자체조례 증가
	자치행정권	• 국가사무 : 지방사무 = 78:22	• 국가사무 : 지방사무 = 약68대32
	자치조직권	• 조직구성 과도한 제약 • 정원: 표준정원제	• 조직구성 자율권 확대 • 정원: 기준인건비제
	자치재정권	• 국세:지방세 = 8:2 • 자체재원 : 의존재원 = 약 7:3	• 국세:지방세=8:2 • 자체재원:의존재원=약 55:42 (지방채 3% 제외) • 국고보조사업 증가
참여	선거참여	•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 참여제한 • 지역정당 불허	•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참여 (정당공천제) • 지역정당 불허
	직접참여	• 주민투표 미도입 • 주민발의 도입 • 주민소환 미도입	• 주민투표 도입 • 주민발의 도입 • 주민소환 도입
	근린참여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자료: 김대욱(2019: 18)에서 수정

Ⅳ. 지방자치의 미래 발전방향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분권과 참여의 구성요소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권의 발전방향을 논의해 보겠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권의 경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적합한 배분을 통하여 지방사무 비중을 적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조직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성의 확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치조직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성의 확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다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율성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치재정권의 경우 지방세 과세의 자율권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부담의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권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의 발전방향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참여의 경우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당의 선거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참여의 경우 경직된 제도적 여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참여의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근린참여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표 3〉 자치분권의 미래비전: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구분	세부요소	미래 발전방향
분권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행정권	• 지방사무비중의 적정화 적정한 비중의 사무배분
	자치조직권	• 조직자율성 확대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실험 및 평가
	자치재정권	• 지방재정 자율권 확충 지방세의 과세자율권 확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 증대
참여	선거참여	• 선거참여 확대 정당공천제 보완 지방정당 설립 인정
	직접참여	• 직접참여제도 정비 제도적 요건 완화
	근린참여	• 근린참여제도 구비 주민자치회 완성 주민대표성 확보

자료: 김대욱(2019: 18)에서 수정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 간 관계의 미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정부 간 관계의 기조가 통제가 아닌 조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자원과 역량을 갖춘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Ⅰ. 행정환경의 변화

1) 자치분권의 확장

최근 한국사회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한 변화로는 정부입법형태로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들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조례의 제정 범위 등 자치입법권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재정분권도 미흡한 수준이지만,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상황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의 확장으로 정부 간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유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구현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이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면, 연방제 국가의 정부 간 관계모형으로 Wright(1988)가 제시한 조정권위모형(Coordinate Authority Model)이 단방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모형으로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간 관계의 기조가 통제가 아닌 조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자원과 역량을 갖춘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Local Extinction)' 시대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이상호(2018;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제주도, 세종시 포함)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97개(42.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농어촌의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의 대도시권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로 지역의 산업기반이 붕괴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균

형발전 정책도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교육·교통·주거·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소멸 우려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소멸시대에는 지방정부의 기관구성과 자치권의 다양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구와 재정력이 상이한 지방정부에게 획일적인 권한과 제도를 적용할 경우, 혁신적인 정책을 채택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로컬 거버넌스나 근린정부의 구현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컬 거버넌스나 근린정부를 통해 주민중심의 정치행정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평화통일시대의 도래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완만한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보편적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예기치 못한 통일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에서 2018년 두 차례나 남북정상이 만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해소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경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시대도 기대된다.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한 플랫폼을 형성하고 북방경제의 교두보화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교류 및 통일과 관련한 차별화된 분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 및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 시군들은 남부지역과의 분도(分道)를 통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묶여 재산권행사의 제약은 물론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남부지역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를 통일에 대비한 가교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고

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의 통치 및 행정운영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등으로 유례없는 자료의 저장·처리능력의 향상과 지식 접근성의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우위를 구분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는 관료제 운영방식은 유연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대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초지능화, 초연결성, 융·복합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행정주체와 관계없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민에게 전달되는(On Demand)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양영철, 201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중앙–지방간 권력관계의 변화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자신이 처한 여건이나 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정책 자율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



반자로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로컬 거버넌스나 근린정부(Neighborhood Government)의 구현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컬 거버넌스나 근린정부를 통해 주민중심의 정치행정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II. 정부 간 관계의 미래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경쟁관계의 형성

지방정부의 다양성(Local Diversity)은 지방정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의 제안과 확산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인구규모나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차별화된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통합형, 지방의회형, 전문경영인형(City Manager), 주민총회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 간 관계모형이 설정되고 자치분권의 양상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도 현재는 지방 4단체를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발전협력회의'가 법적 기구로 제도화되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지방의 권력 자원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경쟁으로 갈등이 증폭될 소지도 있어 국정운영이 중앙-지방 간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경쟁관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능력의 차이가 사라지고, 오히려 규모가 작고 유연한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보다 정책적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Leach & Percy-Smith(2001)가 제시한 분산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분권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재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는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저출산 · 고령화의 여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은 교육 · 의료 · 교통 · 문화 등 정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은 지방세입은 한정되어 있으나 행정서비스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2) 인구감소시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은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은 지방세입은 한정되어 있으나 행정서비스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구 3만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인구 및 재정여건이 일정수준 이하의 과소군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소군을 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읍·면 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광역정부인 도에서는 농촌지역(군)에 대해 광역적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인 군에 대해서는 '특례군'의 명칭과 제한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주민총회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과소군을 도의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읍·면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준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준자치단체는 주민대표(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자치권 확보를 통해 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치입법권 등 핵심적인 자치권은 제한되고, 조례 제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가진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단체를 의미한다.

셋째, 과소군을 자치계층에서 폐지하고 기능은 도로 이관하는 한편, 읍·면을 공식적인 자치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군 폐지로 인해 지역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 연합정부를 구성해 '군 연합정부' 라는 명칭을 부여하거나, 읍·면 연합정부를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과소군의 행정체제를 3층제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과소군 행정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관구성을 통합형인 의회지배인형(Council–Manager)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과소군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군 의회에서 군수를 임명하는 기관통합형으로 운영하지만, 군의 기능과 역할은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군의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 읍·면 자치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거나, 읍·면을 준자치단체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평화통일시대의 연방주의적 정부 간 관계

향후 통일한국의 지방분권적 정부 간 관계의 비전으로 연방주의(Federalism) 정부 간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장영철, 2016; 안성호, 2001). 북미 간 북핵 협상이 타결되어 남북한이 평화공존체제로 전환되면, 통일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와 함께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연방주의 정부 간 관계의 대두가 예상된다.

통일부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단계로는 남북한이 화해·협력으로 시작해 2단계의 2국가·2체제인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3단계에서 완전통일로 가는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중앙일보, 2019. 9. 15).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통일방안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방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안성호(2001)는 "통일한국은 남한과 북한, 두 구성정부가 합쳐진 연방국가가 아니라 10~20개의 주 정부들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연방제 통일국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현재의 중앙집권적 단방제 정부 간 관계를 연방주의적 정부 간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한다. 연방제 정부 간 관계는 국가체제의 효율성 증진, 시민주권의 보장과 시민정신의 함양, 지역불평등과 지역갈등의 해소, 평화통일의 촉진, 국제협력체제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 정부 간 관계는 국가체제의 효율성 증진, 시민주권의 보장과 시민정신의 함양, 지역불평등과 지역갈등의 해소, 평화통일의 촉진, 국제협력체제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안성호(2001). 연방주의적 정부간 관계의 논거와 실천방안. 「경기논단」, 봄호: 27–46.
- 양영철(2017).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환경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 장영철(2016). 지방분권강화 방안으로서 연방국가 원리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22(1): 247–283.
- Leach, R. and Percy–Smith, J.(2001). Local Governance in Britain. Houndmills: Palgrave.

논단

자치분권 미래비전 : 지나온 25년 회고와 앞으로 25년 과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자치분권 비전의 현재와 미래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경험을 종합하여 자치분권을 실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는 발전하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이 적절한 수준에서 권한과 재원을 나누고, 주민이 주인으로서 지방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다.

정부는 자치분권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제시하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6개의 전략,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50년의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비전은 ‘바꾸는’보다는 ‘바뀐 이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치분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치분권 비전체계가 현 정부의 임기 중에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도약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다.

2020년 현 시기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우리나라에서 주민의 직접선거와 함께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래로 50년이 지난 후의 자치분권의 미래모습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50년의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비전은 '바꾸는'보다는 '바뀐 이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치분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결실

충북 영동군은 직접 출자한 토종와인업체 '와인코리아'를 중심으로 와인산업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와인코리아가 영동포도를 재료로 생산하는 '샤토마니'는 국내산

포도와인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들이 다양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10농가 와이너리 육성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일찍이 마을공동체사업(커뮤니티비지니스)을 통해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면 생활단위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주민 스스로 자기 고장의 10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발상으로 주민 주도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 경기 시흥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중기재정전망을 예측하였다. 우선 4곳의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향후 몇 년은 취·등록세입이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시흥시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출처 : 희망제작소(2006).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위 사례들은 지방정부들이 지역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해 지역 주민, 기업들과 공동으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구축하여 운영한 것들이다. 충북 영동군은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고, 전북 완주시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미래를 설계하며, 경기 시흥시는 도시 주택과 인구변화를 예측하여 지방행정 혁신을 이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하나의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중앙집권형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노력한 지방자치의 결과물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주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바꾸고 혁신한 결과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사례들을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앞으로 25년 뒤에도 지속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약되고 한정적인 지방분권의 현실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재원의 배분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과 공공영역이 노력해야 한다. 더 많은 혁신과 바람직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

> 헌법의 전문과 제1조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상상하고, 그에 적합한 정치·행정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지역사회의 핵심 주체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임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의 운영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의 전문과 제1조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및 재정권 등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설계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입법권 강화와 함께 자치재정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의 지출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근거로 재정자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재정을 투입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할 때 진정한 자치분권국가가 된다. 이는 주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의 정당성과 의지를 강화시킨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수평적 관계로 설정하여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헌법에 명시한 지방분권국가 운영원리를 지키고, 현재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점진적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중앙사무를 지방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앙의 권한과 기능은 물론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하여 협력적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은 집행한다는 국가운영 시스템은 21세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여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중복적 사업수행이나 업무의 중복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발전 추진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책설계와 집행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국고보조사업 또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은 한계가 있다. 지역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물론 사업자체의 목표달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중앙의존적인 예산구조는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적 사업기획과 재정투입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 다양한 제도와 규정에 얽매여 있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지역의 범위를 초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중앙사무를 지방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앙의 권한과 기능은 물론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하여 협력적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분권 미래비전 : 2045년의 자치분권

지금은 지나온 25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25년을 그려보는 시점이다. 25년 동안의 수많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의 결실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5년 후에는 자치분권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채택하면서 모든 행정부가 자치분권 또는 지방분권의 강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2045년에는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의 강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20여년 정도의 노력을 통해 자치분권이 강화되어 공고화된 사회를 그려나가야 한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자치분권 미래비전은 지역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틀로 자리잡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각각의 지리적 공간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헌법의 지방분권국가 천명과 중앙에서 규율하는 지방자치법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각 지방정부들은 자치헌장을 제정한다. 자치헌장을 근간으로 각 지방정부들은 비전체계를 정립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수행한다. 주민들은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윤석인(2013).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희망제작소.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자치분권위원회(2019).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 정희윤 · 하민지(2017).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엮음(2017). 한국지방자치 : 발전과제와 미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 인터뷰

• INTERVIEWER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전대욱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 이후 2대(2014.7~2018.6)와 3대(2018.7~현재) 시의회 활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주요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이태환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제2대 세종시의원을 거쳐 현재 제3대 세종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대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2대 후반기에는 교육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아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춘발전소'라는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 세종시 관내의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세종시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를 슬로건으로 세종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99

전대욱 세종시 의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세종시 의회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과 2명의 정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로 총 4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5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4명, 50대 7명, 60대 2명, 70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각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를 슬로건으로 세종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3월에는 참여연대 등 19개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1인당 발언은 3.89건으로 2위, 1인당 입법활동은 3.50건으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대욱 의원님께서는 지난 2대와 3대에서 다수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 혹은 개정조례안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종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청년구직자의 고용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아 세종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6

보이지 않는 곳의 불편들을 해결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고 의정활동을 하는 매 순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99

전대욱 의안발의 외에도 의원님께서는 광역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이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2015년 저에게 어느 지역주민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하수 공사를 새로 하려면 큰 비용이 발생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세입자의 입장에서 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고 하루빨리 상수도를 보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진 상태였고 물 없이 생활하고 계신 지역주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배관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도로개설은 예산을 수립해야 하고 공사를 하기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당장 임시배관이라고 설치해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지만 임시배관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인근대학 소유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인근 대학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임시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부탁하였고 대학에서도 발 빠르게 상의하여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임시배관을 통하여 불편을 겪던 주민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임시배관이 아닌 상수도 보급을 통해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음에 고마웠고 여전히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심에 죄송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불편들을 해결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고 의정활동을 하는 매 순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대욱 의원님께서는 1986년생으로 지난 2대에서 전국 최연소 광역의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청년으로서 광역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말씀해주시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저는 제가 나고 자라온 세종시 조치원 지역을 지역구로 광역의원에 출마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느꼈던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지방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중의 하나가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왜 떠나야만 하는지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실들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그 도시에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중요합니다. 청년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한다면 분명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분명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선거비용일 것입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 정당차원에서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년후보에 대한 선거비용 대출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현실의 벽들을 허물어 준다면 보다 많은 청년의원들이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욱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7년 민주연구원의 '지방정부 정책 모범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또한 2018년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점들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여러분은 한 끼 식사비 4000원으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갈비탕 9000원, 돈가스 7000원의 세종시 물가를 놓고 본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말과 공휴일에 지급하는 급식지원비는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니 실제로 급식지원비의 사용처가 편의점이나 마트인 경우가 86%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가 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16년 기준 서울시(5000원)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급식지원비는 4000원 이하였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급식지원비를 현실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활동을 하며 했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듦과 동시에 오래된 도시의 역사성을 토대로 도시를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욱 **의원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조치원읍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 광역자치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래 된 조치원읍의 지역특성은 다소 대비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조치원읍의 비전 또는 발전전략은 무엇입니까?**

이태환 제가 현재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제가 성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고 자라온 조치원이 세종시라는 새로운 도시로 탄생하였고, 그 새로움 속에서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국책사업에 의해 계획되어 건설되고 있는 건설지역과 기존의 읍·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내에서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낸다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지방이 겪고 있는 현실처럼 조치원 또한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 문제가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듦과 동시에 오래된 도시의 역사성을 토대로 도시를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 또는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시청, 그리고 주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는 어떠한 거버넌스와 협력이 필요할지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태환 다양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라는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결국 이 도시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官) 주도의 도시의 변화상을 만드는 것 보다 시민분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적극적인 시민의견수렴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조치원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춘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치원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치원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주도로 도시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여건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방안들을 고민하여 반영한다면 시민주권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다 견고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욱 **의원님께서도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태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로운 변화의 연속일 것입니다. 긍정적 변화도 있을 것이며 이번 코로나 상황처럼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변화들도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위축된 경기로 인해 당장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과중된 업무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행정처리 등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배치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여민전'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학원, 교습소 휴업지원금, 법인택시종사자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전대욱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소신을 여쭈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된 도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을 일구어 나갈 수 있다면 그 지역은 살아나고 국가 균형발전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세종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종시는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시작으로 균형발전의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에 힘을 싣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인터뷰

• INTERVIEWER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언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최인수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슈와 포럼〉이라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격월간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방의회 코너를 신설하여, 전국의 기초의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선의원이시면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북구의회 의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구의회와 의장님의 주요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주언 반갑습니다. 제7대 울산북구의회 의장 이주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탓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염원을 가득 안고 제7대 북구의회를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우리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도 많았고, 구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도 많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의회 8명의 의원들은 지역발전에 헌신하라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누구보다 부지런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원동력 삼아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집행기관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인수 **기초의원 중에 전국에 8선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경북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님과 전남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님이십니다. 의원님은 초선의원이시면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랄까요. 애로사항이랄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쩌면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주언 제7대 북구의회는 비록 자치단체 의정 경험은 없지만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대다수 신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초선 의원으로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노련함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저를 비롯한 우리 북구의회 초선 의원들은 특유의 재치 있고 활기찬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 같이 거침없는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회에는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털어내야 할 구태라 할 수 있는 당리당략에만 의존하는 의원들을 찾기 힘듭니다.



오로지 지역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저 역시 의장으로서 다수와 소수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협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대 북구의회 구성원들의 의정활동은 잡음 없이 매끄러웠고, 이는 초선의원과 초선 의장으로서 이루고 있는 성과이자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치를 우선으로 하는 의정 운영의 큰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최인수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정책과 아울러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도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언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도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2022년까지 8개 동의 전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동에서 시범 실시 중이고, 매년 2개동씩 연차별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순차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최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안전교육', '내 고장 문화탐방' 등의 사업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신문 발간, 주말직거래 장터 운영, 섶다리 축제 개최 등으로 매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동네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주민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6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신문 발간, 주말직거래 장터 운영, 섶다리 축제 개최 등으로 매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9

최인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주민자치, 마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십니다. 이제 울산 북구 지역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지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주언 우리 울산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설립한 아산 정주영 회장은 우리 북구 염포·양정동 일대 논밭을 자동차 공장 설립지로 선택하고 1967년에 현대자동차를 설립, 오늘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진 공업단지를 갖춰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대 동북아 철 생산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달천철장도 북구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삼한시대 이래 영남지역 최대 철 생산지였던 달천철장은 토철(철 성분이 많이 함유된 흙이나 모래)에서 쇠를 뽑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쇠부리 축제를 개최해 조상들의 철기문화와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또 임진왜란 당시 박봉수 의병장을 중심으로 1천여명의 의병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 나라를 지켰던 기박산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 출신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생가와 유포석보, 유포 봉수대 등 오랜 역사와 문화 등을 간직한 유적이 다양한데, 달천철장과 이들 호국유적을 연계해 호국 역사벨트화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우리 북구는 수려한 해안 자연경관을 품은 관광휴양지로서도 한층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산하해변 등에서는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만끽할 수 있고, 참가자미와 미역 등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특산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 북구를 방문한다면 누구라도 한눈에 반해 후회 없는 일정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66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 고용안정
일자리사업 추진,
화훼농가 지원 등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99

최인수 **울산 북구가 울산경제의 동력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하고요. 북구 지역 현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언 북구 지역의 현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송정역(가칭) 동해선 광역전철 연장 운행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정역은 울산 중구와 동구, 북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용이한 역사이지만, 현재로서는 광역전철 노선이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으로까지만 지정된 상황입니다.
송정역 주변은 광역전철 수요가 높고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해 남부지역 관광벨트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울산 교통의 중심지 북구를 완성하기 위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국도' 조기 완공, 지역 내 호국역사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체험 교육장소로 활용할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조성, 강동 해양관광자원인 '당사 해상캠핑장', '강동 오토캠핑장', '해양디지털수족관', '바다도서관' 건립,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당사·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등 우리 북구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화, 화정마을을 대상으로 '천(川)걸음 이화정마을'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구조 변화, 주거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옛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고헌 박상진 의사의 훈격 상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1915년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후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도, 서훈등급은 3등급에 머물러 있어,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라도 등급을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현안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이라 반드시 추진되도록 의회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최인수 **의원님께서도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산은 대구, 경북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요. 울산광역시 자치구로서의 북구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며, 주민 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언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때 만해도 우리 울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확산 차단에 혼신의 힘을 다한 우리 북구지역 의료진과 시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 덕분에 3월 15일 이후로는 해외유입을 뺀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구는 매주 수요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해서 민·관·군이 합동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금전적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 고용안정 일자리사업 추진, 화훼농가 지원 등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북구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수많은 단체들과 주민들이 자율 방역활동과 기부에 동참한 만큼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인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이나 대형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주언 먼저 조금만 방심해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이 질병에 대응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큰 공포 속에서도 질서 있게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노력해 온 국민들의 인내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를 확산시켰고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온라인개학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여파는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탄탄하고 효율적인 제조업과 민주주의적 사회 작동에 바탕한 모범적 방역 체계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IMF 때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구청 주도로 판매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호응을 받았고, 회와 수산물을 차량에서 바로 구매하도록 해 인기를 끈 당사자연산직판장의 '드라이브 스루 판매'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속속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혀 겪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인수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그래도 여타 시·군 지역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미래 한국사회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전부터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정책도 추진되었고요. 울산에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협력, 지역발전 정책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주언 조선업 위기 등으로 울산의 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북구는 지역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하면서 오히려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7대 의회 개원 당시 20만명 규모였던 북구의 인구는 현재 22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등 인구 감소 걱정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나 울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타 구·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운동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혁신도시는 우리 북구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혁신도시에도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인구와



세수 증가는 물론, 지역 인재 우선 채용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초창기에는 이주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현재는 살기 좋은 울산의 장점을 직접 체감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를 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 감소로 신음하는 울산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갖춘 제2혁신도시와 북구 맞춤형 공공기관을 유치해 청년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북구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구청, 구의회 모두가 여야를 초월해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수 **천천히 인터뷰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울산 북구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하고 계신데요. 하신 일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나 조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주언 여러 가지 활동이 기억납니다. 멀게는 의장 취임 초기인 2018년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 촉구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생각나고, 지난해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 앞 기념비 옆에서 진행한 '3.1운동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합성, 타당성 등을 심사할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66
장점을 갖춘 제2혁신도시와
북구 맞춤형 공공기관을
유치해 청년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북구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구청, 구의회 모두가
여야를 초월해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9

같은해 9월 채택한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도 기억에 남습니다.
북구는 인구 급증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 상황은 저출산 등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의 신설학교 승인 조건 변경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 전향적 재검토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 개정 및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을 건의한 것입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교육 수요와 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의 열망 또한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인수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소신을 여쭈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하얀 도화지에는 원하는 만큼 새롭게 그릴 공간이 많습니다. 초선 의원에게도 지역 발전을 위해 그려 나가야 할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 의장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앞세워 차근차근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의회의 의정활동이라 하더라도 배워야 할 만한 선진 의회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우리 북구의회의 장점을 덧붙여 승화시키고, 지양하거나 배척해야 할 구태와 악습은 일찌감치 거리를 두려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본회의장 입구 현판에는 초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회의장을 드나들 때마다 '구민의 뜻과 의지가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원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게 합니다.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의 확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Ⅰ 입법 배경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과 사무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할 내용들을 포함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묶어 일괄 개정하도록 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면서 16개 정부 부처의 사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가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1987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재실시된 이후 3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집중적 권한 배분이 지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업무와 지방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있거나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임에도 국가사무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실질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2000년 이후 추진되어져왔다.

> 66
> 2012년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2,188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으며 이후에도 지방이양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99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0-2007),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08-2012)에서 중앙 사무와 권한의 지방 이양을 논의했으며,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어 이를 논의해왔다.[1] 이미 정부는 2012년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2,188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으며 이후에도 지방이양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2] 이는 국가중심의 사무배분구조와 더불어 이양이 확정된 사무의 경우에도 실제 이양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이양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법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들을 일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2014년 이후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해왔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수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법률이어서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지 못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심의하고 의결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11월 정부안을 수정한 국회운영위원회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이 법률안이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Ⅱ 지방이양일괄법의 내용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은 총 46개 법률 400개 사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에서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7개 법률 135개 사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토교통부로 70개 사무를 이양할 예정이다.

1) 지방이양 관련 법률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제정되기 시작했다.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8년에는 이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 법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하여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이양이 확정된 국가사무는 3,101건으로 이 가운데 2,188건이 이양이 완료되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백서』, p.112.

〈표 1〉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정부 부처의 지방이양 사무 현황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기획재정부	1	4	보건복지부	3	12
교육부	2	15	환경부	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여성가족부	1	51
국방부	1	1	국토교통부	9	70
행정안전부	6	20	해양수산부	7	135
문화체육관광부	3	26	식품의약품안전처	1	3
농림축산식품부	2	2	소방청	1	1
산업통상자원부	4	22	산림청	2	3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폐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무들이 다수이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부처별 지방이양 주요 사무

부처	주요 사무(소관 기관)
기재부	• 가격표시 명령(국가 또는 시·도 공동)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 시정 혹은 변경명령 등(시·도)
과기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국방부	•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행안부	• 급경사지 등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등록취소 등(시·도) •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시·군·구) •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시·군·구)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시·군·구) •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
문화부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폐관 신고(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폐업 신고 등(시·군·구) •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시·도 조례)
농식품부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 검사(시·도) • 지자체 보조 사업 관련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시·도)
산업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권한(시·도) • 경제자유구역 내의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시·도)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지방상공회의소 설립·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시·도) •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 계획 신고 등(국가와 시·도)
복지부	•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시·군·구) • 외국인환자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등록취소(시·도) • 의료기관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수리/ 실태조사 등(시·도)
환경부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 조사(국가와 시·도)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국가와 지자체) •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시설 개선 명령(시·군·구와 교육청)
여가부	•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점검·확인(지자체)
국토부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관련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에 대한 취소·변경 등 조치 (국가와 시장·도지사) •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변경, 휴업, 폐업 등(시·도) • 측량업 등록(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국가와 시·도) • 부동산개발업 등록·양도, 폐업신고,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시·도) •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국가와 시·도) •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시·군·구)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 권한 위탁(시·군·구)
해수부	•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 사무(시·도) •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입·출항 관리(시·도) •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 감독(지자체) • 지방어항 지정(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개발·관리(시·도) •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취소·운임·요금 인가 등(시·도)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외 해역의 해양시설 신고, 변경신고, 출입검사·보고 등(시·도)
식약처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의료기기 수리업자 검사명령 등(국가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청	• 형식승인 받지 못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시공자 수리·폐기·교체 등 명령(국가와 시·도)
산림청	• 산림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시·도) •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시·도)

자료: 하혜영. 2020. p.3. 〈표 2〉

Ⅲ 나가며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은 자치사무를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업무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무의 이전이 인력이나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 부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400개의 중앙부처 사무가 일시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늘어나는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 제정 이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올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이양 사무들과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여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로 이양되어야 할 사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고경훈. 201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현황분석 및 재정 지원방법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지방자치발전백서』
- 이희태 · 강재호 · 배준구 · 이수구. 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및 재원 배분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4호.
- 최송이 · 최병대. 2012.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추이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 하혜영. 2020.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51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시민의 참여 속 혁신계획을 수립하다!



Ⅰ 들어가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의 흐름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지역의 행정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닌 자원에 비해 대응해야 할 행정수요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혁신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지역혁신 방안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차원의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시정혁신추진위원회, '대구미래비전 2030'을 수립하였다.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은 종전 관중심의 계획에서 탈피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시민참여단의 공개모집을 통해 2015년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마련된 계획안을 2018년 8월에 확정하였다. 또한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민들과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시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구미래비전 2030'은 '글로벌 미래산업 허브', '월드클래스 대도시권의 중심',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동체'의 세 가지 목표하에 주요 핵심사업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내용은'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구광역시 민선 7기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시정슬로건하에 시민참여의 장을 열고, 각종 조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혁신에 대한 제안이 단순히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로서 보장한다는 점은 지역혁신모델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Ⅱ 시민중심 혁신계획 수립과정

1) 시민참여형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계획법 제1조인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작성된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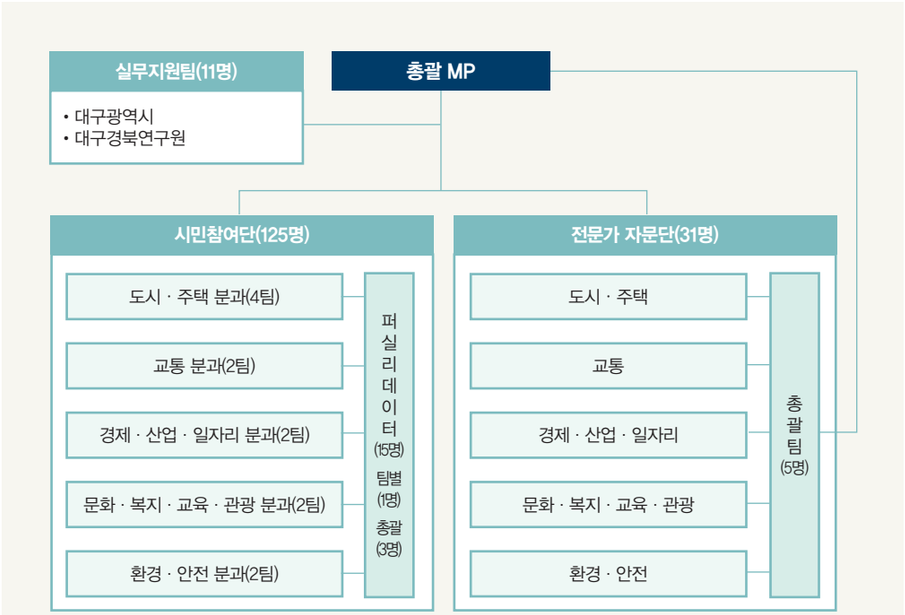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구성되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구분된다.

대구광역시에서 작성한 「대구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작성되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내 국토의

1)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 2020.03.23.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은 종전의 관 주도의 계획을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계획 내에 수렴하였다는 데에서 이전 계획과는 차별화된다. 이러한 시민참여 방식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2015년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구의 미래비전과 발전목표 등을 도출했다. '시민참여단'은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145명의 시민대표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 방식의 합의회의를 참여하였다.

〈그림 1〉 시민참여단 추진체계



*자료: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52

시민참여단은 사전워크숍과 4차에 걸친 토론회, 대구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및 대구플랜을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병행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이렇게 마련된 내용을 토대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각종 공청회, 시의회 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0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고, 민선 7기가 출범한 후 내용을 확정하였다.

〈표 1〉 시민참여단 추진경과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비고
사전 워크숍	2015. 8.27.(목)	대구경북연구원 18층대회의실	• 2020 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시민참여단 역할 및 진행방식 소개	전문가 회의 (7.28, 8.21)
1차 토론회	2015. 9.1.(화)	한국패션 산업연구원 패션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2층대공연장	【대구미래비전을이야기하다】 • 위촉식 • 도시 기본계획과 대구플랜 •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의의 • 2020 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시민참여단 역할 및 진행방식 소개 • 현재 진단토론: 대구시의 좋은 점과 개선할 점 • 미래상 토론: 2030대구의 미래상 및 비전	전문가 회의 (9.4)
제2회 대구 시민원탁회 의	2015. 9.7.(월)	대구시민체육관	【시민이꿈꾸는대구】 • 제 1토론: 2030 도시 기본계획을위한 대구미래상 발굴 • 제 2토론: 미래상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2차 토론회	2015. 9.9.(수)	한국패션 산업연구원 패션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2층대공연장	【대구의 발전목표를 이야기하다】 • 분과별 진단토론: 분과별 대구의 문제와 개선점 • 발전목표토론: 분과별 발전목표 논의 및 도출	전문가 회의 (9.11)
3차 토론회	2015. 9.16.(수)		【대구의 전략과 이슈를 이야기하다】 • 발전전략토론: 분과별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 도출 • 이슈토론: 분과별 이슈제안	전문가 회의 (9.18)
4차 토론회	2015. 9.23.(수)		【미래대구 발전방향을 정하다】 • 종합토론: 대구비전(미래상), 분과별 발전목표, 전략, 이슈에 대한 종합토론 • 발전방향선정: 미래대구의 발전방향 결정	전문가 회의 (10.6)
전달식	2015. 10.8.(목)	대구시청 10층대강당	【경과보고 및 전달식】 • 시민참여단 추진 경과보고 • 시민제안서 발표 및 전달식	

2) 시정혁신추진위원회 설립

대구광역시는 사회적 가치 창출, 시민참여, 관행 탈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혁신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대구광역시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2017년 1월 시민, 전문가, 여성 및 청년 활동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요원, 교통통신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 13명으로 구성되었고, 2018년 5월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시정혁신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는 체감행정확산팀, 서비스혁신팀, 규제·관행혁신팀의 3개 팀과 실무전담 T/F로 시정혁신추진단(단장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였고,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장을 마련하였다.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 지역사회 협치,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리 동네 원탁회의', '시민책임 과장제', '혁신 견문단', '시민참여 집중감사제', '공감&감동 코칭', '영 솔루션'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중 '우리 동네 원탁회의'는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참여 공론장이다. 첫 번째 사례로는 2017년 9월 21일 달서구 성서지역에서 열린 '찾아가는 원탁회의'가 있으며, '성서지역을 바꾸는 오만가지 상상, 머물러 살고 싶은 10년 후 우리 마을'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림 2〉 찾아가는 대구시민 원탁회의



*자료: 뉴시스. 2017.09.21.

또한 '시민책임 과장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를 제안한 시민을 해당 사업부서의 명예 책임과장으로 위촉하여 사업실행 전반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이다. 총 9명의 시민이 명예 책임과장으로 활동하였고, '아파트 층별 호수 표시' 등의 정책제안이 실행되었다.

〈그림 3〉 '시민책임 과장제'의 정책제안 – 아파트 층별 호수 표시



*자료: 경북도민일보. 2017.11.13.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1년여의 활동을 토대로 2018년 1월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5대 전략 21개 과제를 발표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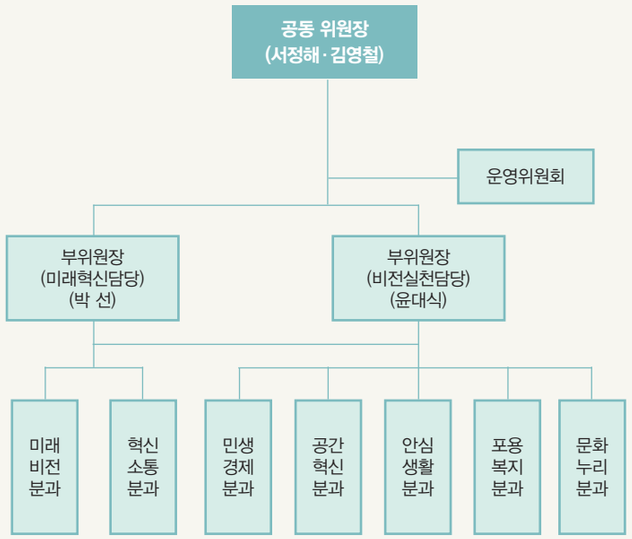
5대 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공감하는 소통 강화 △지역사회기반 협치 확대 △혁신공감대 확산 △시민만족 서비스 확산 등이다.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2018년 5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가 새롭게 발족하였다.

2) CMB 대구방송. 2017.04.05. "대구시, 시정혁신추진위원회 시민중심 추진과제 발표"

3) 「대구 미래비전 2030」 발표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는 대구의 미래비전과 공약실천 전략로드맵 수립을 위해 설립되었고, 서정해 경북대 교수와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 최백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총괄 자문위원을 맡았다. 위원회는 미래비전분과, 혁신소통분과, 민생경제분과, 공간혁신분과, 안심생활분과, 포용복지분과, 문화누리분과의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3]

〈그림 4〉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추진체계



**자료: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8.06.21.

위원회는 7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 시민제안을 받아 채택된 의견을 제안한 시민을 '대구시 명예 책임과장'으로 위촉하여 해당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때까지 자문역을 맡겼다.[4] 이러한 활동은 시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시민참여모델을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2018년 7월 4일 대구지역 7개 정당 관계자와 민선 7기 시정방향과 발전방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녹색당, △ 민중당, △ 노동당 등 7개 정당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특히 청년문제, 소통문제, 대구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안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5]

〈그림 5〉 7개 정당관계자 간담회



*자료: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8.07.04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등 행정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변화를 위기가 아닌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현재의 도전을 미래설계의 발판으로 삼아 보다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그려내고자 미래비전위원회를 출범하여 「대구 미래비전 2030」을 마련하였다.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는 2030년 펼쳐질 대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을 제안하였다. 2030년 대구의 모습은 경제산업에서 '글로벌 미래산업 허브', 도시공간에서 '월드클래스 대도시

3) 뉴시스. 2018.06.21. "대구시, '미래비전 2030 위원회' 출범"
4) 대구신문. 2018.08.22.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5)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8.07.04. "대구미래비전 2030 위원회, 각 정당 정책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권의 중심', 시민 삶의 질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동체'이다. 이러한 「대구 미래비전 2030」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확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의 미래비전으로 자리 잡았다.

〈표 2〉「대구 미래비전 2030」 목표 및 핵심사업

목표		핵심사업	예시
경제 산업	글로벌 미래산업 허브	① 제조업 스마트혁신, ② 신산업* 연구와 생산의 본거지, ③ 4차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 α(항공소재 · 신소재 등)
도시 공간	월드클래스 대도시권의 중심	① 글로벌 게이트웨이, ② 1천만 대구 대도시권 구축, ③ 대도시권 중심도시 역량강화	– 북방경제시대 대비 철도 · 도로 인프라와 통합신공항 연결 – 대구의 경쟁력과 주변도시의 잠재력 연계 지역공동발전 도모
삶의 질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동체	① 대구케어프로젝트, ② 스마트&세이프시티, ③ 시민학습 · 문화도시 조성	– IoT 기술 연계 1인가구, 노인, 장애인 등 스마트케어 – 빅데이터, 스마트센서 등 최신기술 연계 시민안전 보호 – 일터 · 삶터 · 배움터 일체형 학습도시 구현

*자료: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8.09.17.

Ⅲ 지역혁신 모델로서의 시사점

대구광역시의 사례는 시민참여를 통해 시정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에 계승하여 「대구 미래비전 2030」에 반영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동네 원탁회의', '시민책임 과장제', 7개 정당 간담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구 미래비전 2030」 수립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타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참여를 실질적인 정책화와 「대구 미래비전 2030」 수립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시민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시민책임 과장제'를 활용하거나 대구의 장기적 플랜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민 참여의 장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되,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던 우수사례를 계승해 나갔다는 점이다. 「대구 미래비전 2030」은 2015년부터 시작된 「대구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을 기원으로 볼 수 있고, 이때 만들어진 시민공청회, 토론회, 원탁회의 등이 향후 시정혁신추진위원회, 「대구 미래비전 2030」에도 활용되었다.

또한 시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된 '시민책임 과장제'는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시민참여의 장을 안정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시정혁신과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조례 제정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광역시 내 해당 부서 및 사업 T/F 팀을 결성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참고자료

1. 문헌
대구광역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2. 언론보도
경북도민일보, 2017.11.13. "대구시 시민중심 시정혁신 '더 나은 삶 꽃 피우다'"
뉴시스, 2017.09.21. "찾아가는 대구시민 원탁회의"
뉴시스, 2018.06.21. "대구시, '미래비전 2030 위원회' 출범"
대구신문, 2018.08.22.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파이낸셜뉴스, 2017. 5. 7. "대구시 '시민중심 시정혁신'으로 확 바꾼다"
CMB 대구방송, 2017.04.05. "대구시, 시정혁신추진위원회 시민중심 추진과제 발표"

3.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7.01.20. "대구시,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혁신 추진!"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8.06.21.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출범"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8.07.04. "대구미래비전 2030 위원회, 각 정당 정책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8.09.17. "대구시, 민선7기 4년 간의 시정 밑그림 완성!"

4. 검색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 2020.03.23.

興이 시작되는 도시 **시흥**

始興

세계 최대 인공서핑파크가 들어서는
시흥시는 평균 연령 38세 이하의
젊은 도시이자 서울대와 함께 제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미래 도시입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연꽃테마파크 등
자연이 생동하는 매력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과 자연이 생동하는 매력,
이 모든 도전과 잠재력이
'흥(興)이 시작되는 도시, 시흥(始興)'이라는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SIHEUNG CITY 시흥

미래 도시, 시흥

2019년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한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핵심철학을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부터,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도입, 시화MTV와 거북섬 건립까지 시흥의 곳곳은 미래성장의 터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더욱 편리하게, 시흥의 미래는 더욱 스마트하게 하루하루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흥은 지역 주도형 경제도시를 표방하며 새로운 해양경제 시대의 원년을 맞아 시흥밸리 프로젝트의 가시화, 지속 가능한 건강 생태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포용적 복지 정책과 안전한 삶을 보듬는 국제안전도시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시흥은 수도권 내 유일한 스마트시티의 사업단지로서, 미래로 이끄는 기술의 실험장이자 요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서비스를 담는 그릇, 테스트베드이자 플랫폼으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변화를 이룩해낼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스마트 시티가 되어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할 것입니다.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미래 대도시 시흥. 이미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서해선과 더불어 2019년 첫 삽을 뜬 신안산선,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까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내일은 빛납니다. 해양경제의 중심, 시민을 위한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갖춘 창조도시 시흥. 신성장동력을 갖추어 시민이 머물고 싶은 미래도시를 열어갑니다.

생명공원 야경





갯골 캠핑장

명품 관광 도시, 시흥

눈부시게 비상하는 미래도시 시흥은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국가어항인 월곶항을 시작으로 이국적인 경관의 배곧 한울공원 해수체험장, 빨간등대로 유명한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그리고 시화MTV까지 시흥시의 수변에는 특색있는 관광명소가 많습니다. 나아가 해양레저 복합단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을 연계해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어 서해안 대표 해양도시라는 또 하나의 값진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현대사회에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흥은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마음껏 향유하는 도시입니다. 쳇바퀴 돌 듯 반복적인 일상과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인 시흥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 갯골생태공원, 우리나라 최초로 연꽃의 씨가 뿌리내린 연꽃테마파크, 해넘이가 아름다운 오이도까지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시흥. 지쳐있던 일상을 뒤로한 채 오감과 감성을 일깨워 보세요.

> 66
> 시흥은 생태도시라는
> 슬로건을 필두로
> 천혜의 자연환경을
> 보존하고 마음껏
> 향유하는 도시입니다.
> 99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 시흥 갯골 생태공원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벌(내륙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갯벌)인 갯골생태공원은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봄에는 솜사탕 같은 연분홍빛 벚꽃이 하늘하늘 춤추고, 여름에는 너른 풀밭에서 뛰놀며 가을에는 갈대와 코스모스가 장관입니다. 연중 어느 때 가더라도 아름다운 자연 생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갯골 생태공원, 방문하실 거라면 카메라를 꼭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아름다운 갯골생태공원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친구도 매력 있지만 가끔은 언제든 변하지 않고 한 곳에 우직하게 있는 친구가 그리운 법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사시사철 변함없는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공원의 한 가운데 우직하게 자리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들전망대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우뚝 선 흔들전망대를 천천히 오르다보면 갯골생태공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시흥시의 호조벌과 월곶포구 등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을 연상하게 하는 외형의 흔들전망대는 이름에 걸맞게 바람에



갯골 생태공원



호조벌 일출



오이도 전경

따라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정상에 서서 온 갯골을 바라보노라면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흔들전망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조건물에 올라 바람을 맞고 바람과 함께 흔들리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최근에는 갯골에 '가시렁 차(소금 운반용 가솔린 열차)'가 복원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시렁 차의 복원은 옛 소래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공급하던 갯골의 옛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솔린 기관차가 가릉가릉 엔진소리를 내서 이름 지어진 가시렁 차는 소금을 생산하던 옛 염전 사람들의 추억과 일제 강점기 소금을 공출하던 아픈 역사까지 갖고 있는 갯골의 상징물입니다.

다양한 갯골생태공원의 매력, 이 모든 매력을 더 진하게 느끼고 싶거든 갯골축제에 참여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 놀이터'라는 슬로건 아래 넓은 공원 곳곳에 다양한 놀거리와 체험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쌓여있는 소금밭에서 뛰놀 수 있는 소금놀이터와 직접 염부가 되어보는 염전체험, 푸른 하늘보다 더 푸른 빛깔의 천연염색 체험과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공연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열리며 시흥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갯골축제는 이제 시흥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또 경기관광 대표 축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갯골의 매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 하시겠나요? 그렇다면 하룻밤 자고 가는 건 어떤가요? 갯골생태공원은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연과 함께 뛰어 놀다 밤이 되면 정겨운 흙냄새와 풀냄새를 즐기며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쌓는 낭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빨강등대와 옛 시인의 산책길, 오이도

오이도는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시흥시 대표 관광지입니다. 섬이었던 지역을 매립하고 육지와 연결한 오이도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오이도역에서 내려 버스로 조금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차 없이도 편하고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나무 덱을 걷다 보면, 오이도 랜드마크인 빨간등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대는 전망대로 운영되고 있어 등대에 올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넓게 펼쳐진 서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층에는 관광객들에게 시흥의 도시브랜드와 시흥 내 우수 브랜드 상품을 알리는 시흥꿈상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이도에는 조개 캐기, 갯벌썰매 타기 등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시흥꿈상회



66
시흥시에서는
연(蓮)을 활용하여
연근참 콘플레이크,
연잎차, 연근차,
연 막걸리 등 다양한
연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9





연꽃테마파크

오이도는 서해안 최대 패총 유적지이자 다양한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어 선사시대 해양생활문화유산의 보존가치로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이도 선사유적지는 2002년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되었고 이 일대를 보전 정비하면서 2018년 4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개장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시흥오이도박물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선사체험마을과 움집체험이 가능한 야영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오이도 선사유적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패총전시관과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산책하기 좋은 억새길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관람객들이 오이도 선사유적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설투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설투어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방문자 안내소 앞에서 평일과 주말 총 3회(10:30, 13:30, 15:30)가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오이도 유적뿐만 아니라, 시흥의 다양한 문화재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대부도로 넘어가는 시화방조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 어린이 체험실은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놀이터형 체험존으로 홈페이지(oidomuseum.siheung.go.kr)에서 사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3층 상설전시실에는 오이도 유적과 능곡동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 문화의 생활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흥지역 출토 유물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곡지 연지, 연꽃테마파크

연꽃은 시흥시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 명신이며 농학자로 알려진 강희맹(1424–1483)선생이 세조 9년에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며 중국 남경에 있는 전당지에서 연 씨를 채취하여 들어와 시흥시 하중동 관곡지에 있는 연못에 재배한 것이 우리나라 연 재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관곡지가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기리기 위하여 관곡지 주변과 갯골생태공원, 물왕저수지 주변 21ha의 논에 연꽃테마파크와 연근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배 단지 주위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천문관, 자생화 식물원, 곤충 돔, 관상 호박 터널 하우스, 월동 하우스, 어린이 생태 놀이터, 연꽃테마파크 조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꽃테마파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꽃이자 연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빅토리아 아마조니카를 비롯하여 홍련, 퀸, 소마이하이, 파이어크레스트 등 다양한 연꽃을 7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의 토양은 하해혼성충적토로서 점토함량인 높고 미량 원소가 많아 이곳에서 재배된 연근은 맛이 부드럽고 질감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시흥시에서는 이런 연(蓮)을 활용하여 연근참 콘플레이크, 연잎차, 연근차, 연 막걸리 등 다양한 연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특산물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내 연특산품매장, 시흥꿈상회 시흥시청점·오이도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지역사랑 나의 손으로

고향을 품안愛 사랑을 지역愛



'고향사랑기부제' 란?

지역주민이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관련 법안 계류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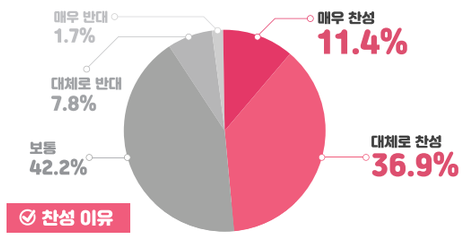
'고향사랑기부제도' 키워드



'고향사랑기부제' 설문조사 결과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85세 미만 약1,000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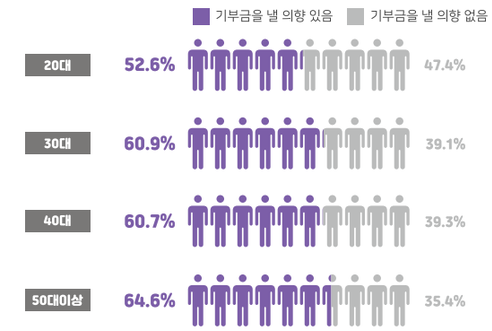
Q1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찬성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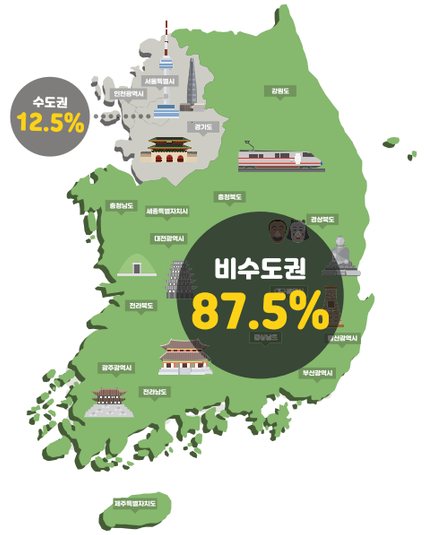
찬성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30.8%
- 본인이나 부모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28.7%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 22.7%
-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6.9%
- 기타 0.8%

Q2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나요?



Q3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지역에 낼 생각이신가요?



Q4 고향사랑기부 할 경우 연간 총 규모 추정 결과는 어떨까요?

모집단 인구수	1인당 연간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추정치	연간 총 규모
만 19-65세 국민 약3,473만명		약3.4조원
전체 납세자 약1,727만명	99,146원	약1.7조원
종합소득세 납세자 약690만명		약6천억원

Q5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길 원하시나요?<상위 4개>



01 건강·의료·복지 26.7%



02 지역산업 진흥 12.9%



03 환경 12.2%



04 아동·육아 11.2%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소멸 억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위해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고향 #지자체 #기부
#공제 #고향세 #고향사랑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도

◎ 자료출처 : 홍근석.염명배(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문의 :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78, hong0582@krila.re.kr)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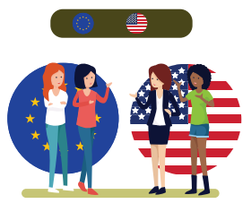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험, 사회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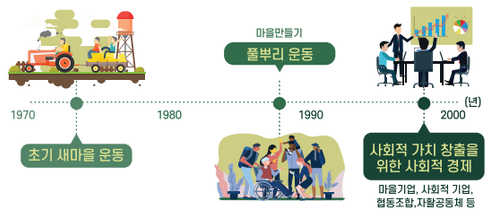
사회혁신은?



정부영역에 편입되어 국가주도 사회구조의 변화를 견인하는 **중앙주도의 혁신으로 재개념화**



주민중심으로 한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안**



한국의 사회혁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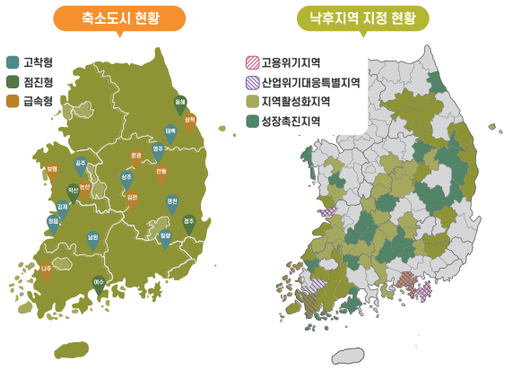
정부의 기존 방식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교류를 바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과정

지역에 관한 주요 쟁점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지역맞춤형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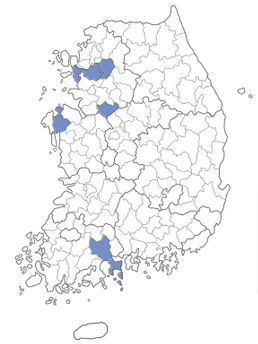
현재	VS	미래
국가주도성 인정		지역간 격차 인정
다양한 참여주체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사회혁신에 포함시킬 것인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국가 주도성 배제한 사회혁신 설계 어려움 다양한 환경요소 파악 및 정책패키지 도출		전국차원 생활인프라 여건 진단 기반한 지원정책 필요 획일적 개발을 탈피한 지역맞춤형 전략 필요

미래지향적 한국 사회혁신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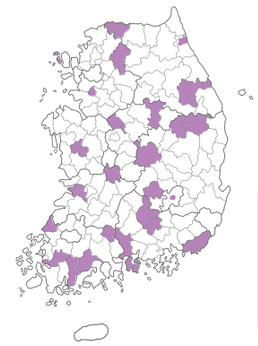
지역맞춤형 혁신 유형화

지역의 특성, 기초여건, 공간범위에 따라 지역 유형화



사회주도형

- 모든 혁신 실험의 재량권 부여
- 시민주체에 의한 주도적 혁신
- 주요 사례
  - 서울 갈등관리매뉴얼, 순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원결합형

- 정부와 시민의 협업
- 정부가이드라인 필요
- 성과창출 후보군
- 주요 사례
  - 포항 스마트방재 시스템, 강원도 장애인 편의지도 등



"지역이 전국을 바꾼다"

#사회혁신 #지역혁신 #작동맥락 #작동공간
#문제해결 #시민참여 #지역맞춤형 #주민주도형

[자료출처]
최지민,강영주(2019),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문의]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56, jmchoi@krila.re.kr)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45, kyj77@krila.re.kr)

바야흐로 OTT 전성시대다.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톱 박스를 통한 케이블,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이동통신 발달로 현재는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한다. 정확히 시간을 맞춰 시청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취향에 맞는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OTT의 인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한몫했다. 다중이용시설을 꺼리는 분위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이들이 극장 대신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On-Line 구독 중
OTT Over The Top 전성시대

OTT 전성시대, 결국 콘텐츠가 답이다

"드디어 나왔다. 〈킹덤2〉." 조선시대 배경의 한국판 좀비 드라마 〈킹덤〉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드라마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됐다. 독자들은 TV가 아닌 넷플릭스 리모컨을 잡았다.

자체 제작 콘텐츠로 승부하는 넷플릭스는 〈킹덤〉 시즌2를 공개한 날, 신규 콘텐츠를 연이어 더 공개했다. OTT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특히 자체 제작물은 로컬 가입자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구독자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 OTT를 찾아 이동한다.

미국에 넷플릭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왓챠플레이가 있다. 국내 OTT서비스 '왓챠플레이'는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영국 드라마 〈이어즈&이어즈〉(Years and Years)를 시작으로 매달 새로운 독점 콘텐츠를 '왓챠 익스클루시브'라는 이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REC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방송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웨이브' 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각각 운영하던 OTT서비스 '푹'과 '옥수수'를 통합해 선보이는 것. 웨이브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지상파와 종편의 드라마 및 예능을 즐긴다면 두말할 것 없이 웨이브를 추천한다.

한편, KT '시즌'은 국내외 유일무이 4K 초고화질(UHD)로 당해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콘텐츠 서비스를 선보이며 구독자를 공략 중이다. 한국에 상륙 예정인 글로벌 OTT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코 '디즈니+'다. 마블과 스타워즈, 픽사, 디즈니 클래식, 내셔널지오그래픽 콘텐츠를 모두 소유한 디즈니+는 콘텐츠 확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는 넷플릭스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있다.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다

OTT 인기 현상은 전 세대에서 관찰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연령별 이용률(2018년 기준)은 20대가 78.4%로 가장 높았고 10대(71.7%)와 30대(64.2%)의 비중도 높았다. 특히 국내 OTT 기업들은 전 연령층이 즐길 국내 지상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생성에도 주력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가 된 레트로 인기에 편승해 여러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도 방영 당시 인기를 끌었던 과거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예비 구독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웨이브'는 '명작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보고 또 보고〉, 〈야인시대〉, 〈태조 왕건〉, 〈수사반장〉 등 다양한 옛날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

CJ ENM OTT 'TVING'도 클립VOD 서비스를 통해 '옛드', '옛능'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종방한 〈황금어장〉이나 〈골든타임〉 등 과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을 짧게 편집된 클립으로 제공 중이다.

OTT 마니아 고정픽! 인기 콘텐츠

넷플릭스

- **종이의 집 시즌 1**
  조폐공사를 털어라! 거액의 돈을 훔치려는 8명의 범죄자가 뭉쳐 세기의 인질극을 벌인다.
- **어쩌다 로맨스**
  사랑 따위 믿지 않는 모태솔로 나탈리. 머리를 다친 후 깨어보니, 내 인생이 로맨스 영화처럼 달콤해졌다?

웨이브

- **FBI 시즌1**
  FBI 뉴욕 지부는 테러리스트, 스파이 등 각종 중범죄에 맞서 활약한다.
- **더 퍼스트**
  지구 밖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려는 인류의 욕망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나사(NASA)는 최고의 우주비행사를 모아 2년 반 동안 화성을 탐험하라는 미션을 준다.

왓챠플레이

- **빅 리틀 라이즈 시즌1**
  평화롭던 마을 몬터레이에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에 얽힌 여성들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 **체르노빌(드라마 · 스릴러)**
  1896년 소련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태를 재구성한 드라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3.30.~6.7.일까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개요

- **기간** : 2020. 3. 30.(월) ~ 6. 7.(일) 10주간(10회)
- **주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실질적 제안 아이디어 공모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분야**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실현가능한 제안은 무엇이든
- **접수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ila.re.kr/customer/request/people/suggest)
- **시상** : 우수작 13편 온누리상품권 (매주 접수 및 시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좌측에서 두 번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원장(좌측에서 세 번째)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전달받는 모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졸업 ·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예전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캠페인에 참여한 이가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꽃 선물 운동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윤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이사장을 지명했다.

KRILA 보고서

1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효성** 부연구위원 | **이장욱** 부연구위원

한국경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다. 자동차는 울산과 군산, 기계는 창원, 조선은 거제 등의 산업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왔고, 이들 도시의 지역경제는 해당 산업의 부침과 함께해 왔다. 지역의 주력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인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증가하는 과실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산업쇠퇴가 지역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상황은 침체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역량의 동원을 요구하게 된다.

지역경제 침체가 지역쇠퇴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지역별 고용의 특성을 각 산업별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 '종업원 1인당 급여'지표로 제시하여, 산업별 노동집약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을 끊임없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에 처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주민들을 가급적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스스로가 적극적 재정, 생산적 재정의 효과를 인식하고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

2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방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연구위원 | **이병기** 연구위원

세계적인 불경기와 그에 따른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역혁신성장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에서 세운 정책이 지방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중앙–지방의 관계(구조), 지자체의 특성(기능), 이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환경)을 중심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서는 첫째, 법 · 제도적 측면에서는 행안부 및 지자체 역할에 대한 미흡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체계적 측면에서 지자체 및 행안부의 규제 애로 사항 등의 발굴을 통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가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권별로 규제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규제를 담당하는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보았다. 결과를 보면, 현재 추진하는 규제혁신은 조금의 효과는 있으나,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조적 측면에서 규제의 특징이나 소관 부처에 따라 규제혁신 추진 절차가 다르고 복잡하고, 상위 수준에서 규제를 정한 법령이 개 · 폐 될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바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운영적 측면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하향식 규제혁신 추진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업무 추진으로 감사를 받거나 본인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의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지방규제의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주민–기업체–지자체가 네트워크로 강하게 연결되어 규제를 완화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강화, 주민의 체감도를 제고시켜 지속적 규제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 이를 지원할 행안부 및 지자체의 규제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KRILA 보고서

3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이 연구는 배제와 소외가 증가함에 따라 포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개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각의 지역이나 구성원 모두가 발전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고루 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포용적 지역발전에 관계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의 포용성장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포용성장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포용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종합하여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들은 제도 및 환경적 측면, 참여와 거버넌스 측면, 의사소통 측면, 공간개방성 측면, 주체 측면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포용성 정도를 이들 부문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외국뿐 아니라 외국의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EU와 영국 등이었으며, 지역으로는 바르셀로나, 뉴욕, 라이프치히, 말뫼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용적 발전을 지역발전의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었다. 지역 내의 공간적 균형발전은 물론 일자리, 교육, 커뮤니티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으로는 지역 어디에 살든지 간에 삶의 질 여건의 균등화를 통해 지역과 구성원의 배제와 소외가 없는 공간 정의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전 및 현재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다른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념을 만들었다. 이전에 비중을 두었던 집계적, 결과적 균형의 달성과 달리 정책의 제반 의사결정에의 형평성 있는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와 성과에서도 배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사람의 포용성, 공간의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추진체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 및 재원의 재편, 법률의 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향후 보다 그 중요성이 높아질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의 설계와 추진시책의 개발 뿐 아니라, 국토 구성원 모두가 고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정의적 관점의 정책 추진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지방행정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는 여러 내외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로 2007년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그간 지방자치, 지방행정분야의 독보적인 저명 학술지로 자리 매김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행정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선도를 위해 더욱 겸허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지역발전 분야 등 지방행정관련 모든 분야
› 원고분량 : A4 25매 이내
› 원고마감 및 발간일정

구 분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원고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발간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마감일 이후에도 수시 접수합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 투고 https://krila.jams.or.kr
› 문 의 처 : Tel_ 033-769-9825 | E-mail_ local@krila.re.kr
› 기고논문은 「지방행정연구」 발간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합니다.
› 원고료 및 게재료는 없습니다.

※ 지난 논문검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지방행정연구" 코너 (http://www.krila.re.kr/?code=research&subp=0201) 를 참고하여 주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우)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반곡동) Tel_ 033-769-9825 | E-mail_ local@krila.re.kr
© 2017 KRILA. All rights reserved